

시선

사설

탈락이 가져다 준 ‘미덕’
차분한 ‘소통’의 시간

우리학교가 프라임사업에서 최종 탈락했다. 탈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프라임사업’이 그간 6개월 이상 우리 대학 내부를 커다란 논란 속으로 몰고 갔던 사안이었던 만큼 ‘탈락’이라는 결과 그 자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이번 프라임사업은 이전까지의 정부지원 사업과 비교했을 때 지원규모는 물론 그 내용면에서도 상당히 과격적인 사업이었다. 이 때문에 프라임사업은 구성원 전체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고, 구성원 간의 극심한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이 논쟁은 비단 사업을 추진하려는 대학과 이를 반대하려는 구성원 간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구성원 사이에서도 소속 단과대학이나 캠퍼스 별로 이해가 상충되는 지점에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며 치열하게 전개됐다.

대학의 세련되지 못한 사업 추진 방식이 이러한 구성원 간 논쟁 상황을 부추긴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신문이 지난 해 여름부터 대학 측에 프라임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질의할 때마다 대학 측은 ‘교육부의 세부계획안 발표 전’이라는 점을 들며 지속적으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도 대학 측은 ‘대외비’라는 명분 아래 관련 정보를 구성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대학은 ‘총 40회 이상 소통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업계획서 제출 며칠 전에 열린 마지막 워크숍에서도 드러났듯 일반 구성원은 대학의 소통을 ‘생색내기’ 정도로 체감할 따름이었다. 프라임사업을 준비하던 지난 6개월은 곧 우리학교가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그간 주장해온 바와 같이 사업 계획안이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하는 것이라면 프라임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학교 운영이 큰 타격을 입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탈락’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미덕이 있다면, 자칫 졸속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던 학문단위 개편과 그에 따른 정원조정을 이제는 각종 부작용과 구성원 불만 사항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채 차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일 것이다.

이제 대학은 대학이 그간 구상하고 있던 프라임사업 계획안을 전체 구성원에게 100%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장 프라임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정원조정, 학문단위 개편 등 실로 무거운 안건들을 실제로 진행해 나갈지, 만일 진행한다면 어떤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이전까지 ‘경쟁대학으로의 유출’을 우려해 공개하지 못하던 각종 정보는, 선정 결과가 발표된 지금 더 이상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프라임사업’이라는 변수가 제거된 이 시점은, 앞으로 대학이 어떻게 대응해가느냐에 따라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커다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끝없는 논쟁과 비판 속에 좌초하고 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구성원의 신뢰는 몇 개의 정부지원사업이나 장밋빛 청사진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성장의 기회가 될지 좌초의 계기가 될지 가르는 분수령은, 언제나와 같이 ‘소통’이 관건이다. 경희가 항상 취약했던, 그 소통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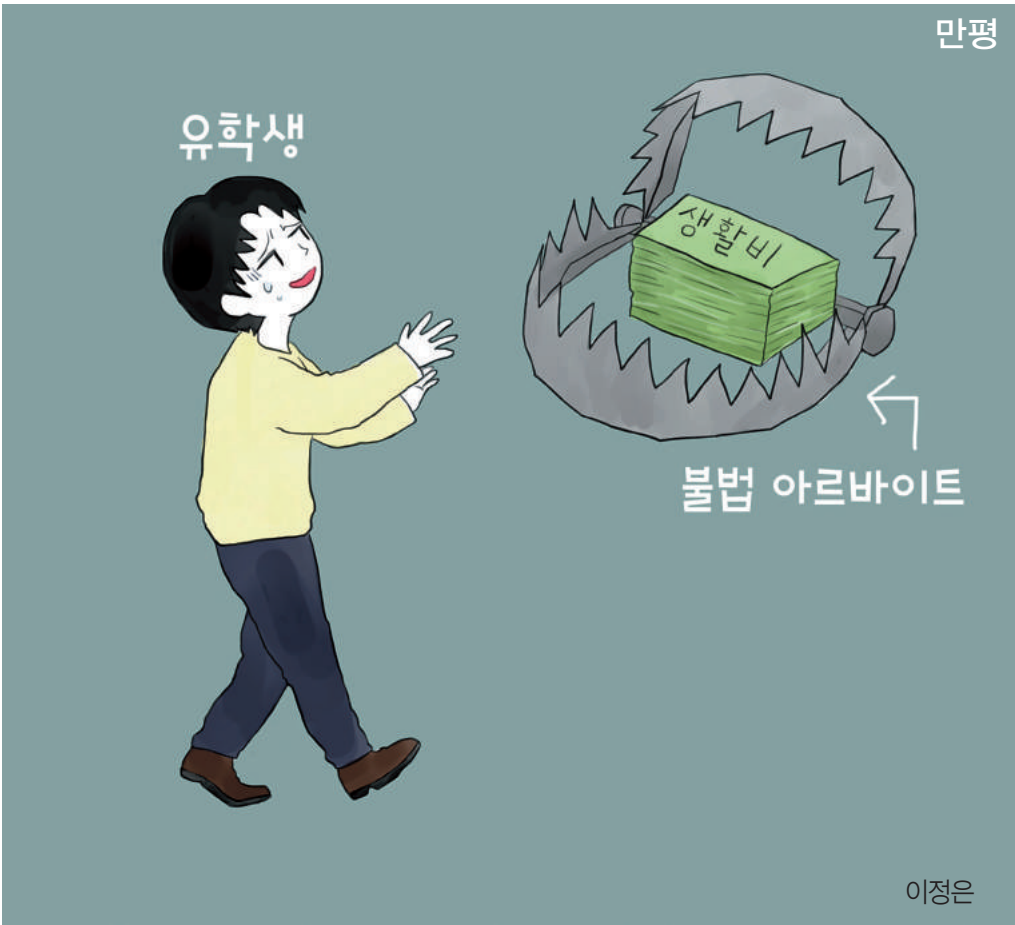
〈조선왕조 오백년〉으로 유명한
사극의 대가 신봉승 타계

미디어 여론동향 2016.04.25.~05.04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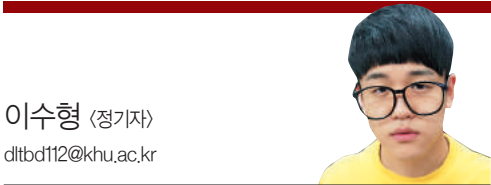
원로 극작가 신봉승(국어국문학 1958) 동문이 지난 달 19일 경기도 자택에서 향년 8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정통 사극의 대가 신봉승 동문 타계/대학주보 온라인, 2016.4.25) 신 동문은 1983년부터 약 8년 간 방송된 MBC 대하드라마 〈조선왕조 오백년〉을 집필하며 ‘정통사극의 대가’로 자리매김했다. 정사 원전 사료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극을 그려내는 그의 사명감은 퓨전사극이 범람하는 오늘날 콘텐츠 업계에 인문학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인은 우리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1960년 〈현대문학〉에서 시·문학 평론으로 등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외국인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여전한 소수자,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이수형 (기자)
dlitbd112@khu.ac.kr

우리학교는 고려대학교에 이어 한국에서 2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대학이다. 학부생만을 따지면 고려대마저 앞지른다. 지난 해 기준 3,144명의 유학생이 우리학교에 등록하는데, 이는 이전 해보다 약 15% 증가한 숫자로 총 재학생 수의 약 9% 규모에 달한다. 통계상으론 30명 정원의 강의마다 유학생이 3명씩 앉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점차 숫자를 불려나가고 있는 그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만큼은 아직 소수자다.

유학생들의 ‘미신고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등의 부당대우를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르바이트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유학생 본인의 과실 때문에 한국인 재학생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법적 구제를 받기도 어렵다. 그리고 ‘미신고 아르바이트’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홀로 해결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문제가 지속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이 부조리한 상황에 순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 중에 만난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중 단 한 명만이 본인이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조차도 “사장님이 친절하시다”며 그 업장에서 반 년 넘게 일하고 있다. 오히려 그들 중 대다수는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려 했다. ‘야간에 손님이 적어서 임금을 적게 받아도 괜찮다’라든지 ‘한국어 공부도 할 겸, 경험삼아 할 만 하다’, ‘3달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임금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등이다. 그들은 부조리에 저항하길 포기한 것으로 보였다.

그렇기에, 문제해결의 첫 번째 과제는 유학생 본인의 권리의식 개선이다. 아르바이트 미신고 유학생들이 신고제도 개선 혹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등을 통해 불법 노동자 신세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더불어 문제해결의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선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소수자가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 이문동 지역의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만 봐도 우리학교, 한국외대, 고려대 등 소속 대학이 제각각이고 중국, 베트남 등 국적도 제각각이다. 이처럼 파편화된 그들을 대표해 정치력을 행사할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지난해 대법원은 외국인근로자 노조에 첫 설립 허가를 내린 바 있다. 각 학교의 유학생회, 지역 알바노조가 이 문제에 무력한 이상, 제자리걸음 중인 유학생 불법 아르바이트 문제해결 동력을 마련할 이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본인들이 유일하다.

많은 유학생들이 불법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의 걸음마를 떼고 있다. 낯선 땅에서 부조리를 겪으며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까. 한국행이 일생일대의 모험이었을 그들은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기억할까. 취재를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엔 의문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없이 몇 개 배졌니 마니 하는 모습이 한심해 보인다’는 일갈을 날렸다. 62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과 단위로 커닝하는 곳이 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ㄱㅇ대’ 족보와 관련된 성토도 연번으로 게재됐다. ‘열심히 공부하고 어려운 문제에 최대한 임했는데 몇몇 동기가 족보대로 나와 편했다는 이야기 들으니 바보된 것 같다’(#경희숲_13879), ‘진짜 ㄱㅇ대 교수님을 족보 좀 파괴해 달라, 족보대로 문제 내는 교수님이 문제다’(#경희숲_13880)는 글은 106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학생들은 ‘인맥이 성적과 직결되어서는 안 된다’, ‘과목을 공부하라는 건지, 교수를 공부하라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과대학 구성원이 Space21 사업에 따라 신축 중인 이과대학관 건축 기금 마련중이다.(이과대학 구성원, 건축 기금 기부/대학 홈페이지 Focus, 2016.5.3) 이과대학 이기태 학장과 박정호 행정실장, 임부자 직원과 이과대학 중앙기기센터 과장을 지냈던 미래문명원 남영수 과장은 최근 ‘글로벌 트러스트 단과대학 기금’을 미래위원회 사무국에 전달했다.

총투표, 무시할 거면
할 필요 또한 없다

세시봉

이시은 <편집장>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가 주최한 학생총투표가 마무리됐다. 지난 2일부터 양 일간 실시된 국제캠 학생총투표의 투표인원은 6,318명으로 재적인원의 과반을 상회해, 다소 짧은 투표기간임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학생총투표는 국제캠에선 그리 특기할만한 뉴스는 아니다.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매년 비슷한 안건으로 비슷한 시기에 꾸준히 반복돼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입학한지 6년째 접어드는 기자의 눈에는 벌써 앞으로의 전개 과정이 그려지기까지 한다.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국제캠에서 벌어지는 총투표나 총학생회(총학) 핵심 공약은 본·분교 인식과 이원화 기준에 연관된 것이었다. 이는 2004년도 학생 투표 안건이었던 캠퍼스 명칭 문제부터 지난해 유사·중복학과와 캠퍼스 특성화 화두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았다. 총투표 이후의 상황 또한 매우 유사하다. 모두 과반이상의 투표율에, 80~90%가량의 학생들이 총학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이후 총투표는 한 달 정도 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다가,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논쟁은 사라진다.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매년 반복되는 안건의 총 투표

분명한 효력 갖고 개선돼야

지난 프라임사업 소통위원회에서 나온 서울캠퍼스(서울캠) 한균태 부총장의 발언만 봐도 이러한 이유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국제캠 총학생회가 프라임사업을 통한 서울캠 이공계열 확대에 대해 온라인의 부정적 여론을 전달하자, 한 부총장은 “그러한 댓글들이 국제캠 학생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당장 작년에만도 국제캠 학생들은 총투표에서 해당 사안과 유사한 맥락의 안건에 대해 약 95%의 부정적 여론을 나타낸 바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의 핵심은 ‘소통’과 ‘의지’의 부족이다. 총학은 매년 같은 공약으로 당선되어 비슷한 안건을 총투표에 걸고, 총학과 맞닿아 있는 학교 부서는 ‘해결 못할 문제를 또’라고 생각하며 ‘중장기적으로’ 진행하자 외친다. 이 와중에 위 문제를 정말 알고 느껴야 할 교내 핵심 인사들은 총투표의 사항조차 모르거나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한 부총장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진다.

다음 수순은 정해져 있다. 벽에 가로막힌 총학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곧 학생들 사이에서마저 관심은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또다시 내년, 내후년으로 미뤄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학교는 10년, 20년을 버텼었다.

학생 총투표의 의미는 크다. 과반을 넘는 의견은 분명 효력을 가져야만 한다. 단순히 ‘학생들끼리 하는’ 의사결정으로 남는다면 이 복잡한 투표과정을 거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관심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결과의 방향을 주시해야만 한다. 10년의 고리, 이제 끊어낼 때가 됐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해경 | 편집장 이시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래7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